

기윤실 이주민운동 저지초청 북 토론회

다민족 사회 대한민국

인종주의를 넘어, 환대와 공존으로



저자 : 손인서 박사(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26년 1월 14일(수) 저녁 7:00
동네극장(서울 동대문구 안암로6길 19, B1)
Youtube 라이브 스트리밍
※ 라이브 종료 후 다시보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저자초청 북토크]

『다민족 사회 대한민국』: 인종주의를 넘어, 환대와 공존으로

■ 발간일 2026년 1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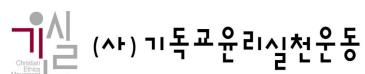
■ 편 집 흥천행

주소 (04382)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로6길 19, 202호

홈페이지 www.cemk.org 전화 02-794-6200 메일 cemk@hanmail.net

*본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순서 및 목차

| 사회 - 김세진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 기윤실 이주민운동 전문위원)

| 미니강연

4p

‘다문화’라는 거짓말 - 이민없는 이민정책, 다문화없는 다문화사회

- 손인서 (『다민족 사회 대한민국』 저자)

| 대담

5p

| 온/오프라인 청중 질문 및 자유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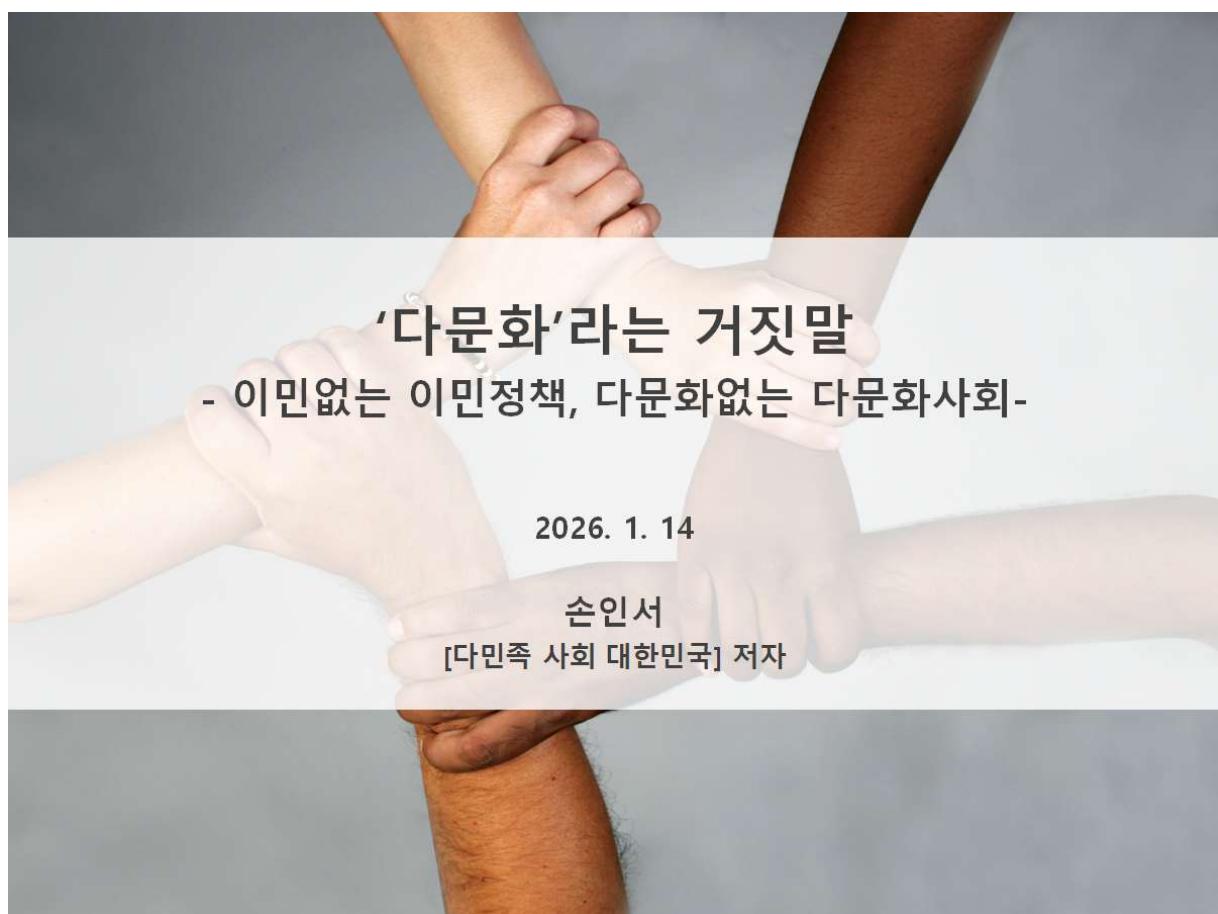
| 마무리 및 광고 - 홍천행 (기윤실 간사)

[미니강연]

‘다문화’라는 거짓말

- 이민없는 이민정책, 다문화없는 다문화사회 -

손인서 (『다민족 사회 대한민국』 저자)



I. 다문화라는 '거짓말'

한국은 정말 '다문화 사회'일까?

오피니언 > 사설

[사설]“곧 인구 5%가 외국인”... 우리도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3-10-30 03:10

5 24

지난달 말 한국 거주자 중 외국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인종·다문화 국가' 기준인 5%에 바짝 다가섰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빠르게 늘고 있어 내년엔 명실상부한 다인종 국가에 진입할 전망이다. 일찍부터 이민을 받아들인 북미·유럽 등 선진국을 제외하고 외국인 비중이 5%를 넘는 나라는 드물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외국인과 공존할 준비가 덜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Inseo Son(panopticon17@gmail.com)

한국은 정말 '다문화 사회'일까?

- **언론과 정부의 주장은,**

- “외국인 인구 5% 도달 시 OECD 기준 다문화 국가 진입”

- **사실은,**

- OECD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공식적 수치 기준(5%)을 제시한 적이 없음.
- 정부와 학계가 정책 정당화를 위해 만든 일종의 '프레임'.

Inseo Son(panopticon17@gmail.com)

다문화(주의)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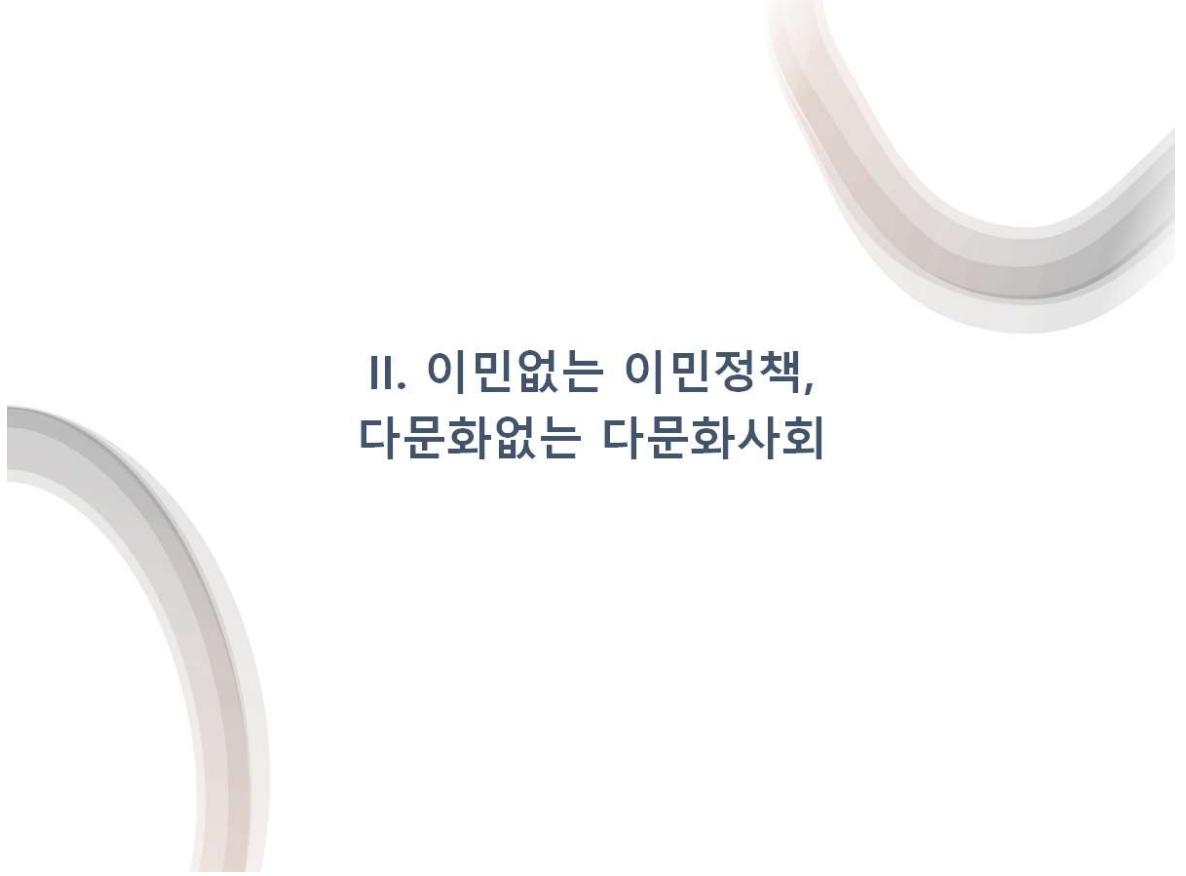
1. **체제 유지의 도구**

-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감추고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

2. **탈인종화(Deracialization)의 도구**

- 존재하는 인종 차별과 구조적 문제를 단순히 '문화 차이'나 '다양성' 문제로 포장.
- “우리가 차별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문화가 달라 적응을 못 하는 거야”

Inseo Son(panopticon17@gmail.com)



II. 이민없는 이민정책, 다문화없는 다문화사회

‘이민’없는 이민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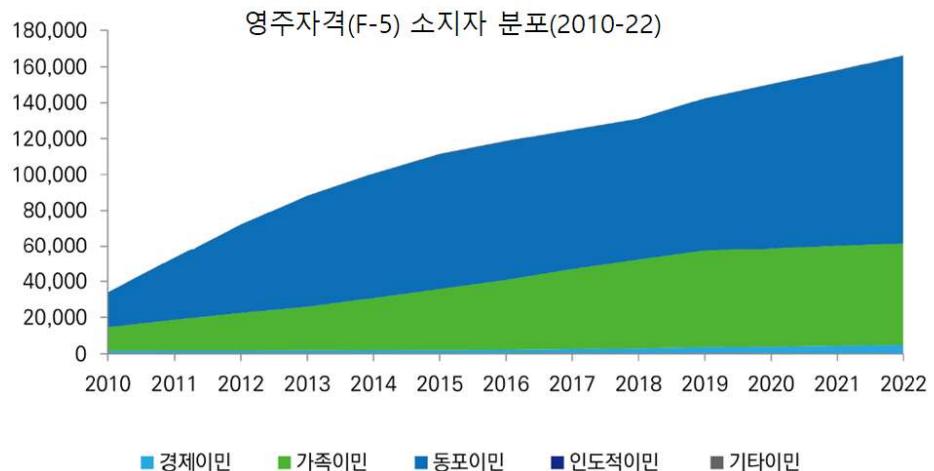
- **차별적 배제(differential exclusion)**

- 노동시장 외 시민권 접근을 불허.
- 한국은,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 외 시민권 접근 차단.

- **단기 순환 원칙**

- 노동시장에서 아주 인력의 순환고용
- 한국은, 단순기능인력의 단기순환고용, 사업장이동금지, 권역이동금지

‘이민’없는 이민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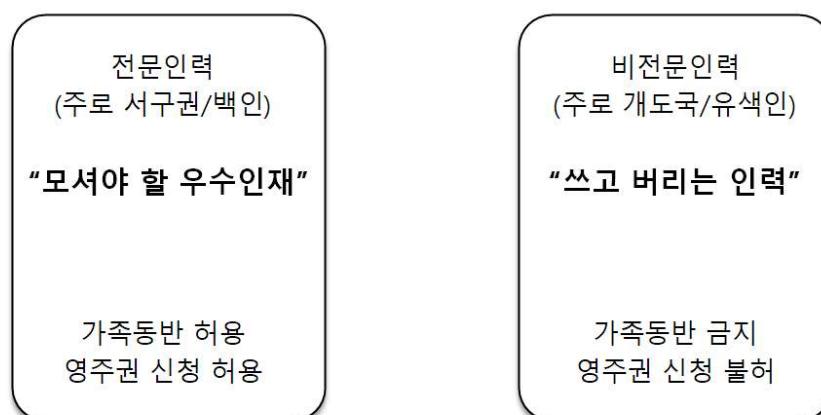


출처: 최서리. 2023. 2010-2022년 국내 영주자격 소지자 추이와 특징. 이민정책연구원

Inseo Son(panopticon17@gmail.com)

인종기획(racial project), 국적과 직업이 인종이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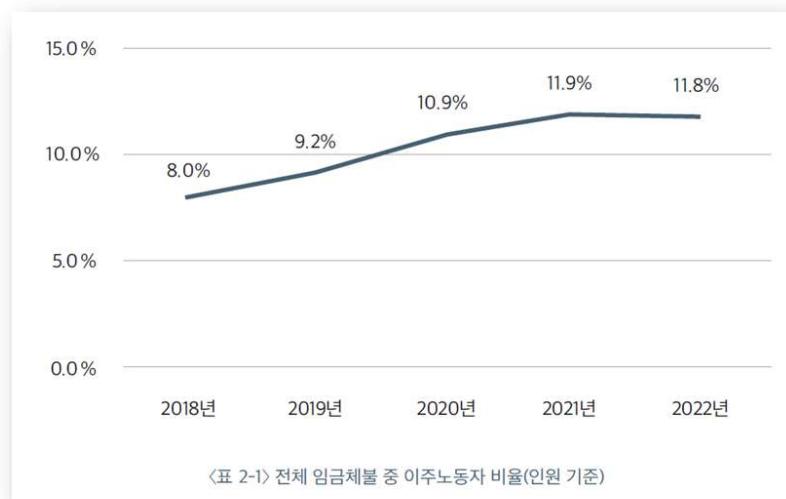
- 정부는 제도를 통해 누구를 ‘시민’으로, 누구를 ‘도구’로 대우할지 결정.



Inseo Son(panopticon17@gmail.com)

인종기획(racial project), 국적과 직업이 인종이 되다

• 인종차별의 증가



출처: 장안식 외,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 국가인권위원회, 2023.

Inseo Son(panopticon17@gmail.com)

다문화없는 다문화정책: 도구주의적 사회통합

• 특정한 '사회적 역할'의 수행을 전제로 이주민을 포용.

- 결혼이주여성: 저출생/고령화 해결을 위한 '재생산'과 '돌봄'의 도구
- 재외동포/비전문인력: 3D 업종을 채울 경제적 도구
- 특별기여자, 지역특화형 비자: 국익에 '기여'한 경우 장기체류 기회부여

Inseo Son(panopticon17@gmail.com)

도구주의적 사회통합: '인력화된' 시민



Inseo Son(panopticon17@gmail.com)

도구주의적 사회통합: 가족에 종속된 시민



Inseo Son(panopticon17@gmail.com)



III. '다문화'에서 벗어나기

다문화에서 벗어나기

1. 법(law)에서 구조(structure)로

- 법리적 관점을 넘어 구조적 모순을 규명하고 근본적 이민정책 개혁방안 모색

2. 문화(개인)에서 인종주의로

- 한국사회에 내재된 인종적 위계와 차별의 작동방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해결방안 마련

다문화에서 벗어나기

3. 다문화 '환상에서 벗어나기'

- '다문화'의 환상: 이주민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이미 계층화되어 있음.
- '시혜'의 환상: 이주민과의 공존은 추상적인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이주민이 이미 사회의 필수적인 구성원임을 인식.

Inseo Son(panopticon17@gmail.com)

감사합니다!

손인서

panopticon17@gmail.com

기
시
교
류

[대답]

낯선 이방인에서, 우리의 시민으로

진행: 김세진(기윤실 이주민운동 전문위원)

저자: 손인서(『다민족 사회 대한민국』 저자)

1. 집필 동기 및 연구 에피소드

지난 40여 년간 한국 이주민 사회는 급격히 변화해 왔습니다. 박사님께서 이 주제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2. 이민 없는 이민정책, 다문화 없는 다문화사회 분석

박사님 책의 1부 부제인 '이민 없는 이민정책, 다문화 없는 다문화사회'라는 표현은 현 한국 사회의 이주민 관련 사회 모순을 꿰뚫는 가장 날카로운 통찰이고, 이 책의 핵심이 담긴 부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자 직강 북토크인만큼, 박사님께서 왜 현재의 '다문화' 담론이 기만적인지, 한국 정부의 이민없는 이민정책에 대한 비판을 직접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3. 다민족 사회 용어의 필요성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다문화'라는 용어의 기만성, 즉 그것이 차별과 동화주의를 가리는 예쁜 포장지가 되어버렸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대안으로 제시하신 '다민족 사회'라는 키워드는 대중에게 꽤 도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단일민족'이나 '순혈주의' 정서가 뿌리 깊은 한국 사회에서, '다민족 사회'라는 용어를 선택해서 이주문제의 분석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4. 이주민 차별의 사회적 비용 및 이주민 존중의 당위성

비자제도가 '현대판 사회적 신분제'로 작동하고 있고,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이주민의 정주를 막고 있는데요,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주민을 시민으로 포섭하지 않고 '착취 가능한 경계'에 끓어

두는 설계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청구할 궁극적인 '사회적 비용'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위 질문과 연계해서, 기독교는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신앙적 명령이 있지만, 각자도생과 경쟁이 원칙인 비종교인들에게는 이러한 명령을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국민 우선주의'를 신봉하는 이들에게, 이주민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왜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한 사회학적 당위가 되는지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5. 강제 단속 위주의 정책과 시민사회의 역할

최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합동단속이 강화되면서, 대구 성서공단에서 단속을 피하던 베트남 유학생 뚜안 님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법질서 확립과 국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무리한 단속이 인명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로서 현재 한국 정부의 이러한 '단속 중심'의 미등록 이주민 대응 방식을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또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민들이 요구하거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6. 돌봄노동 관련 정부 정책의 실패를 통해서 본 성찰

돌봄노동 관련해서, 정부는 가사 관리사를 '근로자'가 아닌 '가사 사용인'으로 규정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피하려 했고, 결국 시범사업은 폐기되었는데요, 사실 그 이전에 이미 박사님께서 관련 논문을 통해서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보험의 적용이 시급함을 촉구하셨는데도, 우리 정부의 정책적 상상력은 여전히 '저렴한 이주 노동력의 수입'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 폐지 사태는 '인권을 소거한 채 노동력만 취하려는 이주 정책'이 돌봄이라는 관계 중심적 노동 현장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아닐까요? 이 실패가 향후 이주민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어떤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7. 능력주의와 결탁한 한국형 인종주의

책을 읽은 독자들은 한국 사회 특유의 인종주의에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백인에게는 친절하지만 동남아/흑인 이주민은 무시하는 이중적 태도, 그리고 조선족(중국 동포)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인종적 위계가 한국 사회에서 유독 강력하게 작동하는 기제는 무엇일까요?

서구의 인종주의가 피부색이나 생물학적 특징에 기반한다면, 한국의 인종주의는 유독 국가의 경제력이 나 개인의 능력과 결탁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말 잘하고 돈 많으면 차별 안한다"는 말은

반대로 "능력이 없으면 무시해도 된다"는 능력주의적 차별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박사님이 보시기에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한국 인종주의만의 독특한 특징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8. 이주민과 권리 확보 및 연대의 방식

지난 기윤실 포럼에서 김혜령 교수님은 '나그네를 향한 사랑은 결국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박사님께서는 책의 3부를 통해, 미국 사회의 소수자였던 한인들이 폭동이라는 거대한 아픔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다른 인종들과의 공존과 연대를 모색하게 되었다고 분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미국 이민자들은 정주를 통해 시민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질 수 있었지만, 한국의 이주민들은 체류 자격조차 불안정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확보하기엔 너무나 척박한 토양입니다.

①한국 사회에서도 이주민 권리 확보가 '이주민들끼리의 당사자 연대'로 가능할지, ②선주민과 이주민이 어떤 방식의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 더 올바르고 효과적일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9. 교회의 정치적 영향력과 정책

이주민 한 사람에게 밥을 사고 친절하게 대하는 개인적 차원의 환대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제도 앞에서는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이 찾아올 만큼 큰 유권자 집단이자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곳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내부적 환대에 머물지 않고, 성경적 가르침(나그네 환대, 공의)에 근거하여 이러한 법과 정책, 시스템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사회학자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10. 실천을 위한 제언

마지막으로, 교회가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진정한 환대를 실천하기 위해 '이것만은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딱 한 가지씩만 꼽아주신다면 무엇일까요?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